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2023. 9. 13.(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주관 | **연금연구회**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CONTENTS

<b>환영사</b>	<b>인재근</b>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
	<b>조정훈</b> 시대전환 국회의원	6
	<b>안철수</b> 국민의힘 국회의원	8
<b>축사</b>	<b>주호영</b>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10
<b>1부 _ 세미나</b>		13
<b>좌장</b>	<b>이근면</b> 전 인사혁신처장	
<b>발제</b>	<b>김신영</b> 한양사이버대 교수	15
	<b>김태일</b> 고려대 교수	31
	<b>전영준</b> 한양대 교수	39
<b>2부 _ 종합토론</b>		69
<b>좌장</b>	<b>박정수</b> 이화여대 교수	
<b>토론</b>	<b>신성식</b>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71
	<b>이창곤</b> 한겨레 선임기자 및 논설위원	75
	<b>김영순</b> 서울과기대 교수	79
	<b>박주하</b> 서강학보 (전)기자	83
	<b>김주영</b> 경북대신문 편집국장	89
	<b>김민경</b> 숙대신문 기자	93
	<b>김설</b> 청년유니온위원장	97

# 환영사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국회의원 인재근입니다.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자와 좌장,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안정적인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를 역피라미드형으로 바꿨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현재의 대한민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도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틀린 것을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먼저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높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희생과 손실을 상쇄시킬 대책이 이어서 시행돼야 합니다.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에서는 크게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1순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차순위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의지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떻게 해야 연금개혁이 성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전(vision)이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명확함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동의가 없으면 명분을 잃고, 믿음이 없으면 동력을 잃습니다. 이 자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 환영사



**조 정 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의 연금 모수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청년세대와 함께 연금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세미나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일 것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함께 뜻을 모아 청년세대와 함께 연금문제를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철수 의원님과 인재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연금연구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따라 오랜 시간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개혁을 20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의 밑그림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적립 기금의 고갈과 미래세대의 연금수령을 중점으로 한 ‘재정안정론’과 노령세대 소득보장을 중점으로 한 ‘소득보장론’의 두 갈래가 줄곧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미래세대 즉, 청년세대의 의견과 입장은 매우 중요한 한 갈래임에도 우리 청년세대는 연금제도 및 현 연금상황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이는 결국 우리 기성세대와 정부가 연금개혁에 있어 체계적 접근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연금에 대한 충분한 학습 없이 연금개혁을 진행하고자 하기에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미래세대에게 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기에,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을 함께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을 둔 진단과 정책,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알려지는 각종 정보와 전문가 논의 내용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학습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미래 세대와 함께 연금개혁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직접 토론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성공적인 동력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13일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

# 환영사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늘 연금연구회와 우리 연금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세대가 함께 모여 개혁 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다른 의원실과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연금개혁만큼은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을 모든 대선 후보가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연금개혁이 포함된 것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보다 미래 출생률 가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음에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5년 전에 비해 2년 당겨졌습니다. 2040년 1,755조원 적립금이 2055년에 소진됩니다. 이 적립금에다,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의 15년 동안 보험료와 투자수입액을 합치면 4,000조원에 달합니다. 연간 300조원이 연금액으로 지급되면서, 단 15년만에 4,000조원이 없어지게 될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상황이 이리 암울함에도, 현재 관점에서 우리 연금의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연금이 처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10% 포인트 올리고, 보험료율은 12%까지 3% 포인트 인상할 경우”, 2093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404.4조원(불변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 소득대체율에서 발생한 적자에 이만큼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오늘 세미나에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규모를 계산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연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젊은 세대 분들께서도, 전문가가 제시하는 수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연금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의 우렁찬 외침을 기대하면서 환영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축 사



주 호 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을 주제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연금개혁의 성공과 세대 간 공감대 확대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안철수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연금연구회와 발제, 토론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되고,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그 이후에는 소득의 26%를 보험료로 부과해야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위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맡겨진 무거운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하지만 연금개혁에는 더 많은 부담이 따르고, 부양 구조에 따라 지금의 청년들을 비롯한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로 인해 세대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세대간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좁히려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세대간의 상생을 도모하면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연금개혁의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고 더욱 완성도 있는 연금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 호 영**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1부 세미나

**좌 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발 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전영준 한양대 교수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발 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 한국청년세대 복지태도지형과 공적연금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2023.09.13.

## ◇ 목차 ◇

1. 문제제기 및 분석방향
2. 분석자료 소개
3. 분석결과
4. 소결

## 1. 문제제기 및 분석방향

-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세대는 단순한 생물학적 연령집단이 아니며 역사적 및 사회적 과정 속에 자리 잡은 연령집단임
- 대략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역사적 및 사회적으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연령집단의 동시대인들과 현저히 구분되는 행동, 감정, 사고의 방식을 가질 때 이 연령집단은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됨
- 즉, 세대는 일종의 사회적 위치 또는 위치정체이며 특정 세대가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것은 특정 연령집단이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특성 이외에 일정 유형의 행위, 감정,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준거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Mannheim, 1928).
- 공적연금을 포함한 주요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위한 증세 등의 이슈에 대한 한국 청년세대의 전반적인 인식지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내용임

## 2. 분석자료 소개

-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자료(2022년 조사)를 분석에 활용함
- 한국복지패널<sup>1)</sup>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 빈곤패널 및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하여 2006년도에 7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음
- 복지인식 모듈은 3년을 주기로 진행되어 왔으며 분석대상은 조사 시점 당시 20세에 79세 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응답자 집단임

1)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 및 농어촌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을 한층 증가시켰으며 조사내용 또한 가구특성, 가구경제상황, 가구 및 가구원의 복지수급 및 복지욕구 등을 포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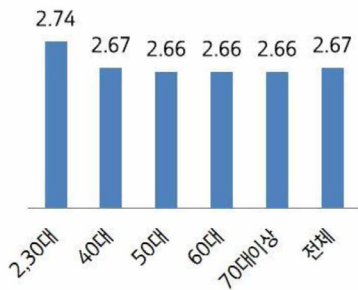
- 분석에 활용될 변수는 10세 급간으로 나눈 연령변수, 8개의 복지영역 변수<sup>2)</sup>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주거지원, 빈곤층 지원, 노년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가정 및 양육 지원, 실업 및 고용), 복지를 위한 증세<sup>3)</sup>, 정치적 성향<sup>4)</sup>, 보편주의 vs 선별주의<sup>5)</sup> 등임.

- 2) 각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을 조사하였으며 ‘훨씬 더 많이 지출’에서 ‘훨씬 덜 지출’까지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 3) 원 조사문항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이며 응답항목은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로 7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 4) ‘매우 진보적’에서 ‘매우 보수적’까지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 5) 원 조사 문항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응답항목은 ‘모든 국민대상’, ‘소득하위 70%의 국민 대상’, ‘소득하위 50%의 국민 대상’, ‘소득하위 30%의 국민 대상’,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 3. 분석결과

1) 복지영역별 세대차이: 평균차이 검정 및 사후비교(유의수준: .05)

건강보험(F = .916/p = .453)



공적연금(F = 7.896/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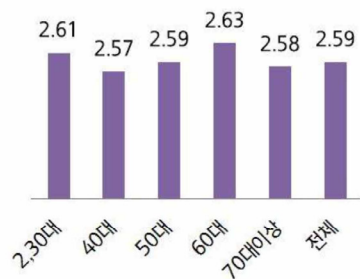


- 낮을수록 해당 영역 정부지출 확대 지지
- 건강보험에는 유의미한 세대차이 없음
-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지출 확대에 반대
- 사후비교분석결과, 230대 및 40대 vs 60 및 70대 간의 차이가 유의함

주거지원(F = 6.359/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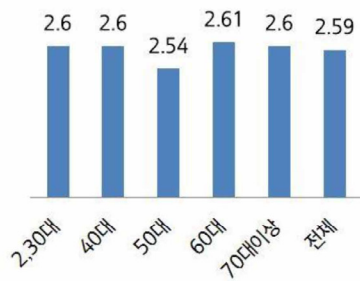


빈곤층지원(F = .539/p =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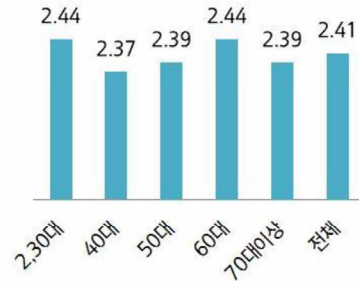


- 낮을수록 정부지출 확대 지지
- 주거지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지출 확대 지지
- 사후비교결과, 230대 vs 50, 60, 70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함
- 빈곤층지원에는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노인 생활지원(F = .751/p =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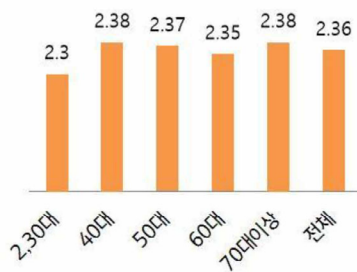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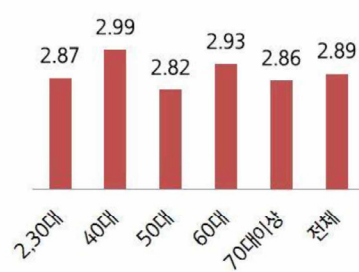


장애인지원(F = .784/p = .535)



- 낮을수록 정부지출 확대 지지
- 노인생활지원에는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 나타나지 않음
- 장애인지원에도 역시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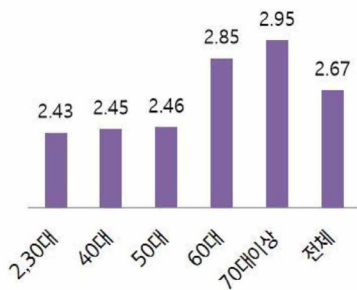
양육 지원(F = .706/p = .588)

실업 및 고용 지원  
(F = 2.967/p = .019)

- 낮을수록 정부지출 확대 지지
- 양육지원에는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 나타나지 않음
- 실업 및 고용지원에서는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남
- 사후비교분석결과 40대 vs 50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음

2) 세대별 복지관련 주요 변수(정치적 성향, 복지위한 증세, 사회서비스 대상)

보편 vs 선별  
(F = 22.747/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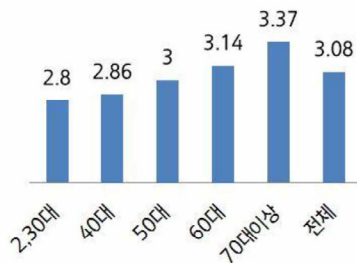


복지위한 증세  
(F = 8.035/p = .000)



- ‘보편 vs 선별’의 경우, 낮을수록 보편주의를 지지함
- ‘보편 vs 선별’의 경우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남
- 사후비교분석결과, 230대/40대/50대 vs 60대/70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 ‘복지위한 증세’의 경우 낮을수록 증세를 지지함(7점 척도)
- ‘복지위한 증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지위한 증세를 지지하며 차이는 유의함
- 사후비교분석결과, 230대, 40대, 50대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60대는 230대와, 70대는 230대/40대/50대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정치적 성향  
( $F = 33.976/p = .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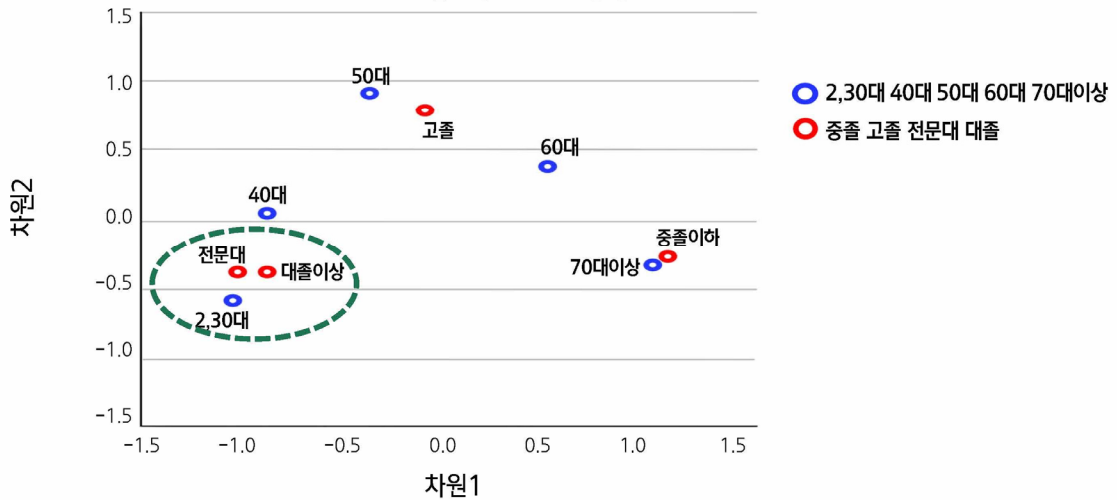


-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나타냄
-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며 세대별 차이는 유의미함
- 사후비교분석결과, 230대 vs 50대/60대/70대간, 40대 vs 60대/70대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50대는 230대와 70대 두 집단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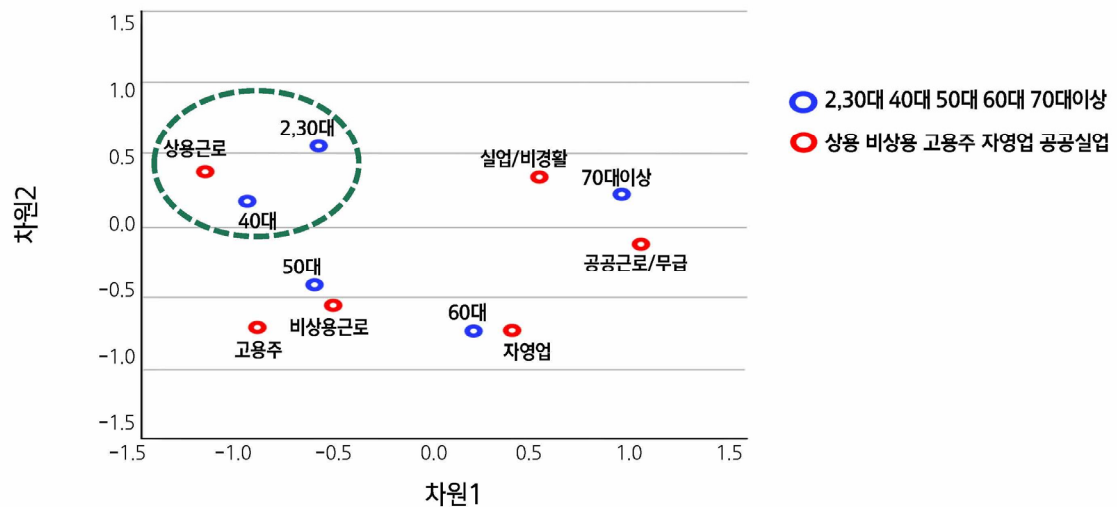
- 정부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청년세대가 중장년 및 노년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복지영역은 '공적연금', '주거지원', 그리고 '고용 및 실업 지원' 임
- 한국의 청년세대는 '주거지원' 과 '고용 및 실업 지원' 에는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에는 정부지출 확대에 반대하고 있음
- 한국의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진보성향이며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로 본 한국 청년세대: 대응분석 결과

연령대별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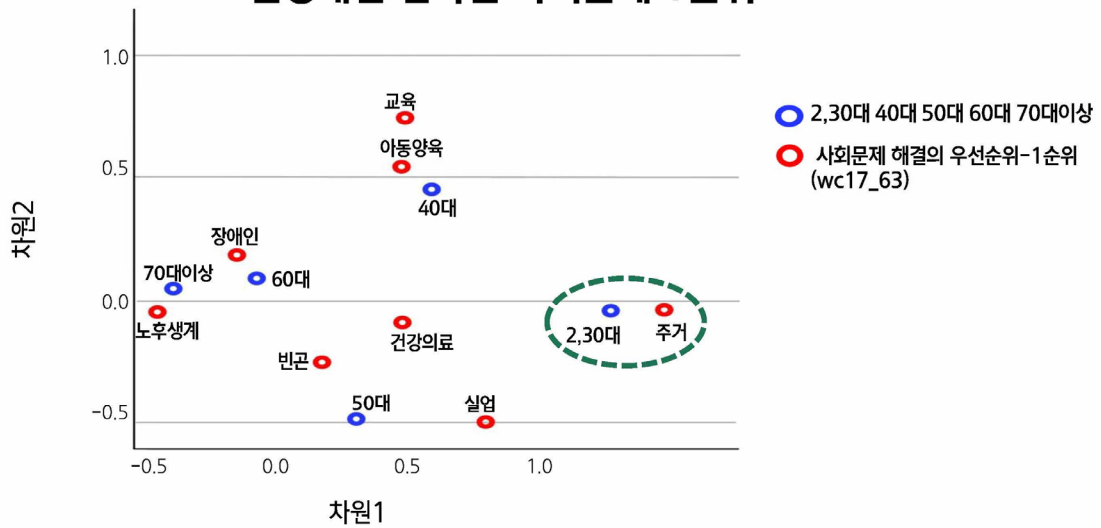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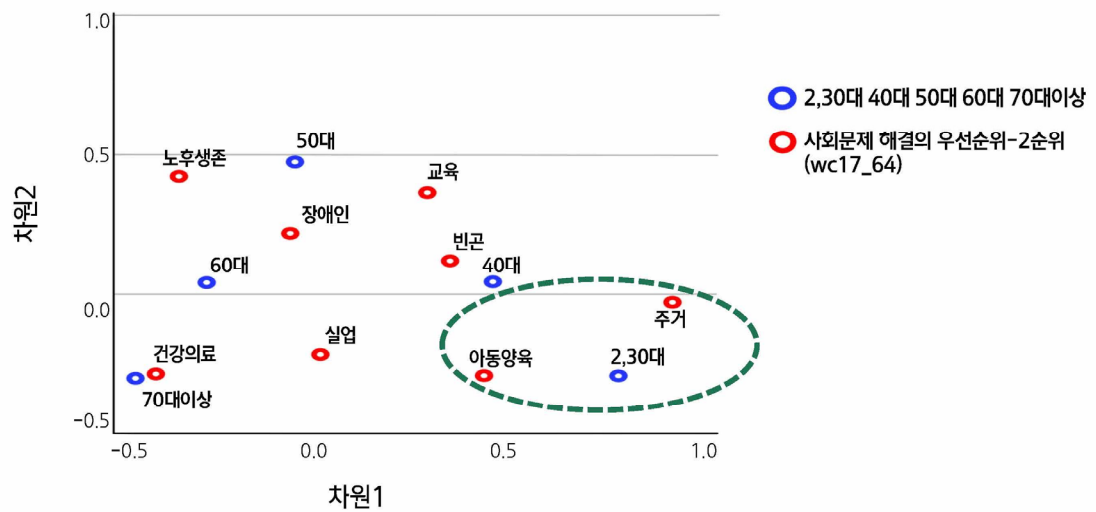


- 한국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주요 사회문제(1,2 순위): 대응분석 결과

### 연령대별 심각한 사회문제 1순위



### 연령대별 심각한 사회문제 2순위



3) 요약:

- 한국의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주거'와 '아동양육'을 지목하고 있음
- 세대별 차이의 측면에서 공적연금과 주거지원 영역에서 세대의 독자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소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4. 소결

- 1) 생활보장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임금, 고용불안, 무주택, 빈약한 자산 등으로 특징되는 한국의 청년세대는 일종의 고위험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이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확대에도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2) 복지국가의 규범적 기초를 “생활을 집합적으로 조직화하는 주체로서 국가(또는 정부)를 사회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동시에 제도가 부여하는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한국의 청년세대가 보이는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3) 그러나 재분배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종종 혜택과 부담 사이의 불일치, 심지어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기본 가정으로 할때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불일치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사현, 2015), 한국의 청년세대에게서 관찰되는 비일관성을 특별한 문제라고 보긴 어려움
-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이고 공적연금에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2030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국민연금 관련 조사결과들을 보면...

**“2060년 월급의 34% 국민연금 내야”... MZ세대 부담 커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31/118625840/1>

**MZ세대 10명 중 9명 "국민연금 고갈 불안"**

<https://www.mk.co.kr/news/stock/10750685>

한국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마이클 프렌티스, 영국 셰필드대 동아시아학부 한국학 교수)의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세대 연구에 따르면 상명하복 질서를 중시하는 기업 내 ‘나이 든 남성 관리자’와 ‘젊은 ‘MZ 세대 직원’의 갈등에 주목한 결과...

- 1) 위계질서엔 거부감이 컸지만,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받는 수평적 구조도 거부하는 모습 (수평 호칭 정책의 실패 및 직급 및 직급제로의 회귀)
- 2) 젊은 직원들은 자신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길 원함
- 3) ‘늙은’ 상사를 비하하면서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존댓말을 쓰고, 항상 일정한 어조를 유지하며, 회의를 커피숍에서 하고 술 마시는 회식 대신 맛 집에 가는 등의 형태로 나타남)

프렌티스 교수는 한국 젊은 세대의 이러한 모습을 낡은 정신에 대한 반향으로 나타난 ‘새로운 세대 정신’으로 이름 붙임

복지와 관련된 한국 청년세대의 새로운 세대정신은 혹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

- 1) 나의 삶을 내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화 하는 정부에 반대한다.
- 2) 그러므로, 제도가 부여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
- 3)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fair도 않은 복지제도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

#### 몇가지 질문들...

-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의 국민연금제도와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어떠할까?
- 가까운 미래에 생활보장수단의 개선이 기대되지 않고, 공적연금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국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제도에 계속해서 순응할 것인가?
- 국민연금제도에 자신의 노후를 의지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에게 최소한 제한적으로나마 합리적 선택인가? 그리고 정부는 무슨 논리와 정당성으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지속을 젊은 세대에게 요구할 것인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발 제

김태일  
고려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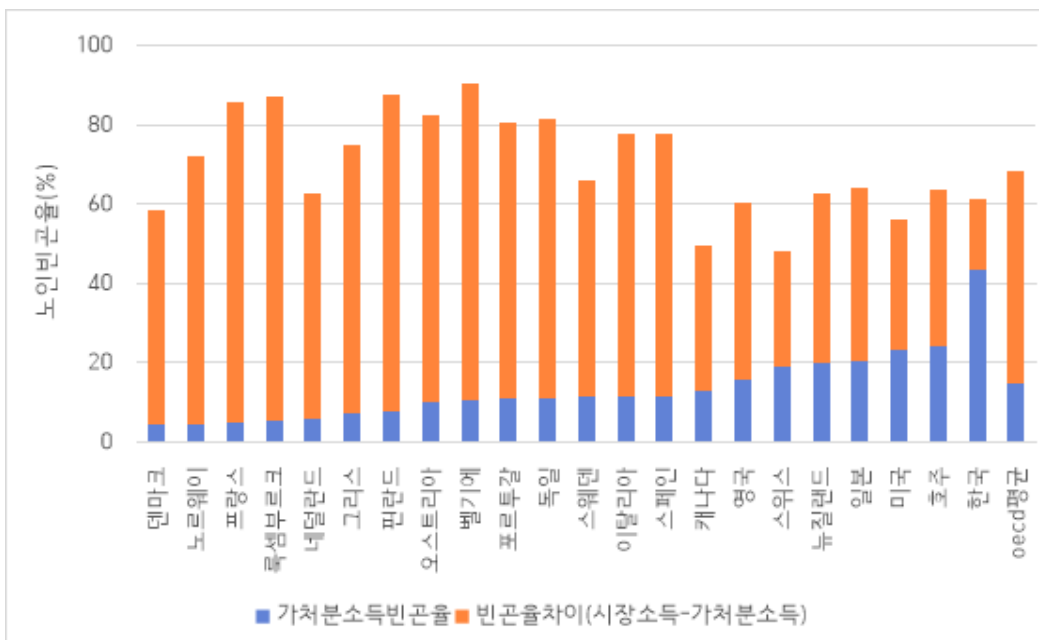


# 발제문

김태일 고려대 교수

## □ 연금은 왜 필요한가? - 연금이 없었다면

〈 주요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2019년 기준) 〉



자료: OECD.Stat에서 발췌

## □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가? 기금고갈 후 보험료 30% 되어야 한다는데

- 재정추계 의미는 지금 상태가 그래도 되었을 때의 미래 예측
- 현재 9% 보험료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 기금고갈 된다는 것
- 물론 기금고갈 후 30% 보험료는 가능하지 않음
- 그렇게 안 되려고 연금개혁하고 보험료 올리려는 것

## □ 보험료 올리는 것은 젊은층 희생으로 노년층 이득보는 것인가

- 현재 수급자 및 가까운 장래 수급자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음
- 낸 보험료에 매년 5% 정도의 수익률 붙을 때, 소득대체율 40%면 보험료는 18% 정도가 균형 보험료
- 즉 보험료 18%까지는, 자신이 매우 높은 수익 올릴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 개인연금보다 이득
- 보험료를 18%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낸 것(+운용수익)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정당성 없음.
- 마지노선은 18%이며, 이를 빨리 달성할수록 재정 안정성에 유리
- 이번에 18%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우선은 15%를 목표로

### [관련 팩트]

우리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체계를 지닌 OECD 국가 중 우리처럼 소득대체율 대비 보험료 낮은 국가 없음. 우리 정도 대체율에서는 18% 정도

## □ 국민연금의 보장성 수준은 낮은가

- 제도 설계상의 소득대체율(연금급여가 근로시기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라고. 그러나 2021년 OECD 연금보고서는 31.2%로 제시.
    -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3년 286만 원) 기준 40년 가입 가정, OECD 연금보고서에서는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자(2020년 393만 원, 당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은 244만 원) 기준 38년 가입 가정
    - OECD 연금보고서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보다 매우 낮음.
    - 이 차이는 비교 기준이 달라서임.
      - 가입기간 상한 연령차이(우리는 59세까지, 다른 OECD, 국가는 65세까지) 기초연금 제외(OECD는 공공부조로 간주하는 듯)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상용근로자 평균소득 기준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보다 소득대체율 내려감.
-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 공적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거의 소득비례임. 저소득층 이상에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소득대체율 일정

- 독일, 프랑스 등 사회보험 연금 중심국가에 비해 소득대체율 낮은 것은 사실. 그러나 보험료는 훨씬 낮으며, 우리는 퇴직연금이 이를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 실제의 소득대체율

- 실제 소득대체율은 40% 또는 31.2%에 훨씬 못 미침.
- 현행 수급자뿐만 아니라, 미래 수급자도 이대로라면 훨씬 못 미침.
- 이유는 짧은 가입기간 때문. 실제 가입기간은 40년이 아니라 18년. 미래에도 25년 남짓.

유럽국가의 공적연금 통계(2019년 기준)

지역	국가	기여자 비율(%)		기여기간(년)	수급률(%)
		전체대비	경찰대비		
북유럽	핀란드	75.2	91.5	34.7	102.2
	스웨덴	100.3	114.8	40.5	109.3
서유럽	프랑스	75.9	97.2	33	102.6
	오스트리아	78.5	97.8	37.3	-
	벨기에	72.3	97.0	37.5	98.6
남유럽	이탈리아	66.8	94.8	36.2	91.8
	스페인	80.7	102.1	38.9	87.7
	포르투갈	83.6	102.6	30.3	98.8
유럽 8개국 평균		79.1	99.7	36.1	99.0
한국		59.1	81.4	17.8(25)	44.5(77.2)

- 우리는 평균 가입기간 짧을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성별 격차 심함.
- 우리처럼 가입기간 짧고 소득과 성별에 따른 격차 심한 나라 찾기 어려움.

### □ 국민연금 가입의 소득과 성별 격차

- 2019년 10월 기준, 소득 5분위는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다섯 집단으로 구분.

30세-59세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률(%)

소득계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입률	59.0	70.6	75.5	75.4	74.2

**55세-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입기간(년)	10.2	12	13.6	15.6	19.5
최소가입기간 충족률(%)	35.7	49.0	58.0	66.3	76.1

**18세-59세 연령대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연령대	18-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전연령대
남성	28.6	72.9	82.8	82.7	81.0	79.2	76.8	75.2	71.3
여성	32.5	70.8	65.2	57.6	59.3	64.1	68.0	70.4	60.7

**55세-59세 연령대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특성**

	평균 가입기간(년)			최소가입기간 충족률(%)		
	남성	여성	격차	남성	여성	격차(%P)
전체	18.8	8.9	9.9	77.3	39.1	38.2
남5/여1	24.6	6.1	18.5	92.8	22.7	70.1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 소득대체율 = 지급률×가입기간
- 지급률은 가입기간 1년당 소득대체율. 40년 40%면 1.
-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지급률 높이자는 것. 가령, 지급률 1.25로 높여서 40년 가입시 50% 되게 하자는 것.
- 지급률 인상은 오랜 기간 가입할 수 있는 안정된 정규직에게 혜택 집중
-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로 더 올려야.
- 국민연금 보장성 낮은 이유는 주로 짧은 가입기간에 기인.
- 가입기간 확대 정책 필요
-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는 것은 평균 가입기간을 20년에서 22.5년으로 2.5년 높이는 것과 동일한 연금급여액 증대.

## □ 가입기간 확충 방안들

- 가입연령 상한 연금수급개시 직전연령까지 높일 것  
연금의 목적이 일할 때는 보험료 내고, 일을 그만 둔 노후에는 연금을 수급하는 것
- 군 복무 전기간에 대해 연금 가입 인정할 것  
군 복무 기간 취업 못하고 보험료 못 냄. 군 복무 급여 인상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도 필요
- 출산 크레딧 확대할 것  
출산 크레딧 제도 있는 국가 중 첫 아이 인정 안하는 곳 대한민국이 유일  
첫 아이부터 인정하고, 자녀당 인정기간 늘릴 것. 2-3년.
- 실업 크레딧 확대할 것  
현행은 생애 1년까지 인정. 역시 대한민국 가장 짧음. 3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확대 필요  
현행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
- 크레딧 재원은 일반재정(조세)으로 하고, 크레딧 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할 것

## □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정합성 확보 필요

- 빈곤층 이상은 국민연금+퇴직연금
- 빈곤층은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최저소득보장

## □ 기초연금 개혁

-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년빈곤 방지. 현행 기초연금이 이 역할 잘 하고 있는가?
- 빈곤층 아닌 사람도 대상, 빈곤층에게는 부족한 액수
- 대도시 거주 노인 부부, 공시지가 7억 원 집 소유, 2천만 원 통장잔고, 월 300만 원 근로소득
- 이분들도 기초연금 수급대상
- 기초연금 대상 줄이면서 수급액 높여야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

- 궁극적으로 기초연금은 노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서 최저소득보장으로
- 여기서 절감되는 재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충에 사용해야

## □ 퇴직연금 개혁

- 지난 10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 정도. 국민연금은 5% 정도. 해외퇴직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
- 흔히 민간은 공공보다 효율적이라는데 왜 퇴직연금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낮을까?
- 왜 다른 나라 퇴직연금은 수익률 높는데 우리는 낮을까? 차이는
- 퇴직연금의 두 유형: 기금형과 계약형, 디폴트 옵션
- 기금형은 가입자의 적립금 모아서 집합적으로 운용, 계약형은 각자 알아서 운용
- 국민연금은 일종의 기금형.
- 디폴트 옵션은 스스로 운용 어려운 경우, 디폴트 옵션 적용.
- 다른 나라 디폴트 옵션은 엄선된 높은 수익률. 우리는 원리금보장형
- 퇴직연금이 강제라면, 높은 수익률 달성은 정부 책임.
- 퇴직연금, (종신)연금 형태 수령 거의 없는 것도 낮은 수익률이 주원인

##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하려면

- 일단 보험료율 15%까지 서서히 높여야
- 그 이후 다시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  
보험료율 추가인상 or 일반재정투입 등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중요  
단, 관련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해야
  - ① 기대수익률 높이면 위험 증가한다는 것 분명히 해야
  - ② 기금운용 여건은 지금까지보다 향후에 더 안 좋아질 것
  - ③ 기금운용 수익이 크려면 기금 규모가 커야.

⇒ 수십 년 일하고 일하는 동안 보험료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웬만큼 노후소득 보장되어야. 이는 복지국가의 당연한 책무  
국민이 노후 불안해 하고, 심지어 연금 지속가능성 우려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발 제

전 영 준  
한양대 교수





# 국민연금제도 개편의 연금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

전 영 준 한양대 교수

## 〈요약〉

- 본 자료에서는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하에서의 연금 재정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연금 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확충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제도 개편안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였음.
  - 또한 이러한 제도개편안들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음.
- 현시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 재정은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 1,0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있으나, 연금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임.
  - 연금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는 연금의 ‘암묵적 부채 수준은 2023년 시점에 1,825조 원(GDP의 8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 재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GDP의 1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본문의 <표 1> 참조).
    -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각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수급할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됨.
    - 암묵적 부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연금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급여지출액의 재원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수입과 연금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함을 의미함.
- 연금 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을 고려하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제도 개편이 필요함.

- 별도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연금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보험료율이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생 연도에 따라 부담의 증가 폭이 다르지만,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 폭이 생애 소득의 6~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본문의 [그림 4] 참조).
-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연금 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연금기금의 증가, 연금기금 고갈 시기 지연, 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줄여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본문의 <표 1> 참조).
  -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편은 세대간 재분배를 유발함.
    - 출생 시기가 비교적 빠른 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연금기금 고가 시기를 늦춤으로써 출생 시기가 비교적 늦은 세대들의 순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본문의 [그림 4] 참조).
-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확충을 위한 연금 급여 수준의 상향조정은 연금 기금을 줄이고, 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기며, 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늘려 연금 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본문의 <표 1> 참조).
  - 연금 급여의 상향조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 일부의 순조세부담을 줄이지만, 현시점의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됨(본문의 [그림 4] 참조).
- 연금기금 수익률의 상승은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본문의 <표 1> 참조).
  - 순조세부담이 줄어드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지만, 순조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세대의 범위는 한정적임(본문의 [그림 4] 참조)
-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기능 등을 다양한 측면의 고려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도 개편은 어느 측면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임.
    -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의 심각성, 노인인구의 빈곤율 향

후 추이, 그리고 빈곤을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의 존재 여부와 그 대안의 효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최소한 본 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위험을 가중될 것이며,

- 그릴 뿐만 아니라 재정적 위험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유지 가능성도 위협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민연금제도의 유지 가능성은 다른 제도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음.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여타 노인 관련 서비스 등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 제도를 통한 정부 지출의 절대액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중도 증가할 것임.

-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는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정부 지출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부 지출 중 국민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수준인가? 등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목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I. 배경

- 은퇴 후 노후 소득 확충 기능 수행의 목표하에 도입된 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시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약속한 연금 급여 수준과 이 연금 급여지출액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연금 재정이 향후 심각한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도입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빠른 인구의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험을 가중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한국은 2000년 이전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1998년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제도개편안이 반영된 이후 몇 차례의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화되고 있지 못하며 제도 개편이 미루어져 재정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이 4차례 이루어졌고 현재 5차 재정재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제도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추이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연금 재정과 각 세대의 금전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음.
  -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기금 수준, 기금고갈 시기, 연금의 암묵적 부채 등)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제도개편안이 연금 재정과 세대별 금전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제도개편안의 세대별 금전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였음.
  - 연금 보험료를 상향조정, 연금 급여 상향조정, 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연금 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각 세대의 순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침.
    - 여기서 말하는 순조세 부담은 국민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급여의 가치를 차

감한 것을 의미함.

- 국민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 급여 수준 조정의 규모와 조정 시기에 따라 세대 별로 순조세 부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 제도 개편이 각 세대의 생애 전체 동안의 순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분석
- 세대간 회계는 각 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출생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서 제도 개편으로 인한 각 세대의 회계 변화를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II절에서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상정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서 논의함.
- III절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이 국민연금 재정과 세대별 순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IV절에서 본 자료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관해 기술함.
- 본 자료의 끝에 <부록>을 추가하였음.
  - <부록 1>은 본 자료의 재정추계 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 <부록 2>는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세대간 회계의 개념에 관해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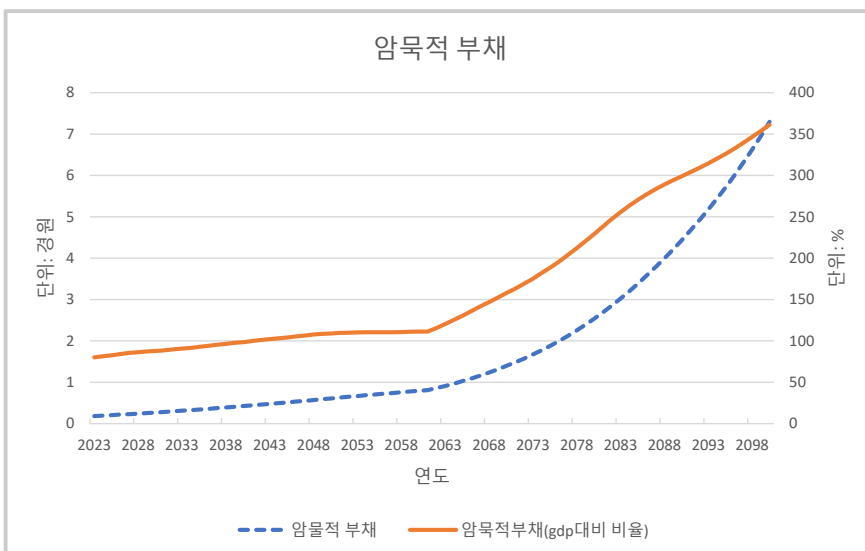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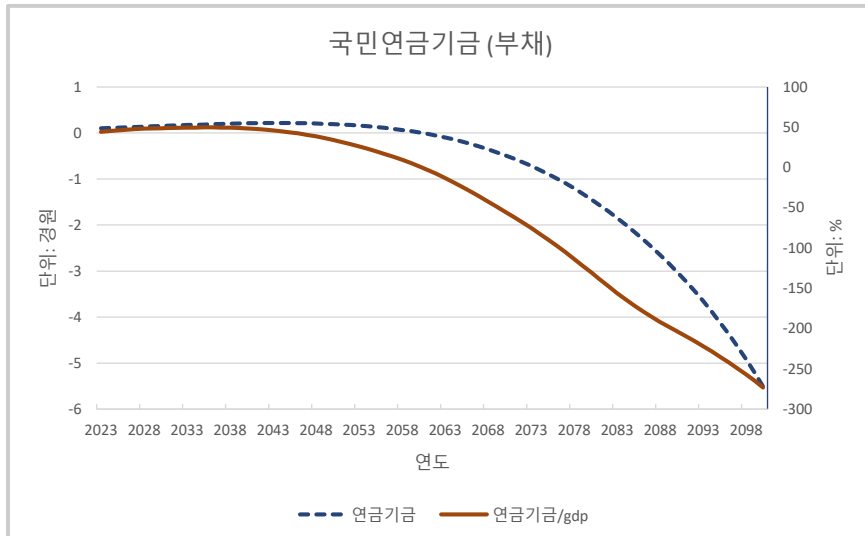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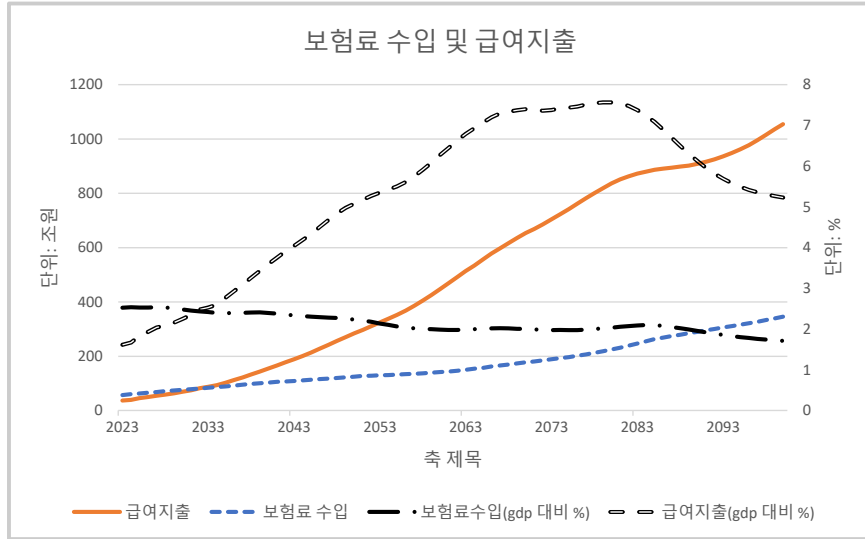
## II. 기준선 전망

■ 현행의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 [그림 1]).

- 급여지출액은 2023년 약 36.8조 원에서 2090년 908.9조 원으로 증가
  -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급여지출액은 1.6%에서 6.1%로 증가할 것을 전망
-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3년 약 57.6조 원에서 2090년 290.1조 원으로 증가
  - GDP 대비 비율은 2.5%에서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31년까지 연금보험료 수입은 연금 급여지출액을 웃도나 그 이후 급여지출액이 연금보험료 수입을 웃돌아 두 변수 간의 격차가 확대됨.
- 국민연금 기금의 절대액은 2044년에 최고치 약 2,152조 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기금은 2060년경에 소진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비율은 2035년에 최고 수준 49.6%에 도달한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도 연금 급여와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면 국민연금 재정의 부채는 2090년 GDP의 200%까지 증가하며 그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의 추이에서도 확인됨.
-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각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수급할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됨.
    - 이 금액을 '암묵적 부채'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부채가 각 시점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국에는 연금 재정의 부채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임.
  - 암묵적 부채는 2023년 현재 1,825조 원에서 증가하여 2050년에는 6,105조 원으로 증가하고 2090년에는 4경 4,385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암묵적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80.1%에서 2050년 109.1%로 2090년에는 약 30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연금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음.
- 현시점에 대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연금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들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웃도는 금액이 연금기금보다 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금기금은 소진되고 연금 재정의 부채가 축적될 것이기 때문임.
  - 본 추계결과는 현시점의 암묵적 부채 수준이 높은 수준이며 정책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기준선 전망



출처: 저자 계산

〈표 1〉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결과

	현행	[1-1] <sup>1)</sup>	[1-2]	[1-3]	[2]	[3]	[4-1]	[4-2]	[5]
기금고갈 연도	2060	2068	2081	2124	2053	2065	2062	2066	2080
연금 급여 지출 (조원)	2023	36.8	-	-	-	-	-	-	-
	2050	284.3	- <sup>2)</sup>	-	-	336.8	-	-	299.3
	2090	908.9	-	-	-	1080.7	-	-	1069.1
연금 급여 지출 (GDP 대비, %)	2023	1.6	-	-	-	-	-	-	-
	2050	5.1	-	-	-	6.0	-	-	5.3
	2090	6.1	-	-	-	7.3	-	-	7.2
연금보험료 수입 (조원)	2023	57.6	-	-	-	-	-	-	-
	2050	125.0	166.7	208.3	250.0	-	-	-	166.7
	2090	290.1	386.8	483.5	580.2	-	-	-	483.5
연금보험료 수입 (GDP 대비, %)	2023	2.5	-	-	-	-	-	-	-
	2050	2.2	3.0	3.7	4.5	-	-	-	3.0
	2090	2.0	2.6	3.3	3.9	-	-	-	3.3
기금 (부채) 규모(조원)	2023	1,010	-	-	-	-	-	-	-
	2050	1,901	3,059	4,218	5,377	899	2,377	2,925	4,450
	2090	-30,181	-17,497	-4,812	7,872	-47,124	-26,926	-22,706	-7,432
기금 (부채) 규모 (GDP 대비, %)	2023	44.4	-	-	-	-	-	-	-
	2050	34.0	54.7	75.4	96.0	16.1	42.5	52.3	79.5
	2090	-203.5	-118.0	-32.4	53.1	-317.7	-181.6	-153.1	-50.1
기금 (부채) 규모 (연간 급여지출 대비, 배)	2023	27.5	-	-	-	-	-	-	-
	2050	6.7	10.8	14.8	18.9	3.2	8.4	10.3	15.6
	2090	-33.2	-19.3	-5.3	8.7	-51.8	-29.6	-25.0	-8.2
임목적 부채 (조원)	2023	1,825	1,603	1,381	1,159	2,485	1,821	1,817	1,815
	2050	6,105	5,538	4,491	2,878	7,401	5,936	5,920	5,761
	2090	44,385	32,339	20,293	12,476	63,536	41,270	37,231	25,510
임목적 부채 (GDP 대비, %)	2023	80.1	70.4	60.7	50.9	109.1	80.0	79.8	79.7
	2050	109.1	98.9	80.2	51.4	132.2	106.0	105.8	102.9
	2090	299.3	218.1	136.8	84.1	428.4	278.3	251.0	172.0

주: 1) 정책 개편 시나리오는 〈표 2〉 참조  
 2) 현행제도 하에서의 수준과 동일  
 출처: 저자 추계

### Ⅲ. 정책 개편 효과

#### 1. 제도 개편 시나리오

##### ■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표 2>에 제시

- II절의 기준선 전망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함.
-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안으로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 연금 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가 연금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연금 재정건전성 이슈와 별도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의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 다음과 같은 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상정

- 시나리오 [1-1] ([1-2], [1-3])은 연금보험료를 2023년부터 15년간 점진적으로 현행의 9%에서 12% (15%, 18%)까지 상향조정을 상정함.
- 시나리오 [2]는 2023년부터 연금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현행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상황을 상정
- 시나리오 [3]은 연금 급여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상황을 상정
  - 2023년부터 2028년 기간에 기존의 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에 도달하는 세대들의 연금 수급을 1년 늦추고,
  - 2028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세대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세대들의 수급개시연령을 2년 늦추는 대안을 상정
- 시나리오 [4-1] ([4-2])는 연금 기금수익률이 추계에서 상정한 이자율보다 0.5%p (1.0%p) 높아지는 상황을 상정하였음.
- 시나리오 [5]는 시나리오 [1-2], [2], [3], [4-1]을 동시에 반영한 정책대안임.
  - 연금보험료를 12%로 상향조정
  - 연금 급여 임금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
  - 연금 수급개시연령 67세로 상향조정
  - 기금수익률 0.5%p 상향조정

〈표 2〉 제도 개편 시나리오

	개편 내용
현행제도	-
[1-1]	2023년부터 15년간 연금보험료율을 12%까지 상향조정
[1-2]	2023년부터 15년간 연금보험료율을 15%까지 상향조정
[1-3]	2023년부터 15년간 연금보험료율을 18%까지 상향조정
[2]	2023년에 임금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40%에서 50%로 상향조정
[3]	2023년부터 10년간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4-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0.5%P 상향조정
[4-2]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1.0%P 상향조정
[5]	[1-2], [2], [3], [4-1] 동시 적용

## 2. 연금 재정 지표 변화

- 연금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시나리오 [1-1], [1-2], [1-3]), 연금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되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는 여전히 잔존함.
  - 연금보험료율을 12% (15%, 18%)로 상향 조정하면, 연금보험료 수입을 늘림으로써 연금기금 소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연금기금이 2068년 (2081년, 2121년)에 고갈되며, 그 이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으로 전망 (〈표 1〉, [그림1])
  - 연금기금은 현행제도 하에서의 수준(2050년 GDP의 34.1%)보다 증가하여 2050년에 각각 54.7%, 75.4%, 96.0% (시나리오 [1-1], [1-2], [1-3])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보험료율을 18%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 [1-3]을 시행하면 2090년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적립 기금이 GDP의 53.1%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
  - 연금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연금 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연금의 암묵적 부채가 여전히 큰 규모로 남아 있음.
    - 2090년에 연금기금이 상당히 큰 규모로 남아 있는 시나리오 [1-3]하에서도 2090년 현재 암묵적 부채가 당해 GDP의 84.1% 수준에 이르고 있음.

- 2090년에 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나리오 [1-1], [1-2]하에서는 2090년 현재 암묵적 부채가 현행제도 하에서의 수준 (GDP의 299.3%)보다는 낮아지지만 큰 규모의 암묵적 부채가 잔존 (각각 218.1%, 136.8%)
- 연금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40년 가입기준 현행 40%를 50%로 상향 조정하면 (시나리오 [2]), 연금 재정이 상당 수준 악화됨.
  - 연금 급여지출액이 현행제도(2050년 GDP의 5.1%, 2090년 6.1%)보다 증가함 (2050년 6.0%, 2090년 7.3%).
  - 연금기금 고갈 시기도 2060년에서 2053년으로 빨라짐.
  - 연금의 암묵적 부채도 2023년(2050년, 2090년) 현행제도 하에서의 수준 80.1% (109.1%, 299.3%)보다 높아져 109.1% (132.2%, 428.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금 급여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면 (시나리오 [3]), 소폭의 연금 재정건전성 효과가 있음.
  - 연금 급여지출액이 현행제도(2050년 GDP의 5.1%, 2090년 6.13%)보다 소폭 감소 (2050년 4.5%, 2090년 6.06%)
  - 연금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에서 2065년으로 늦춤
  - 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2023년(2050년, 2090년) 현행제도 하에서의 수준 80.1% (109.1%, 299.3%)보다 낮아져 71.1% (103.4%, 278.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금기금 수익률을 0.5%p, 1.0%p 높아지는 상황을 상정하면 (시나리오 [4-1], [4-2]), 소폭의 연금 재정건전성 효과가 있음.
  -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에서 각각 2062년 2066년으로 늦춤
  - 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2023년(2050년, 2090년) 현행제도 하에서의 수준 80.1% (109.1%, 299.3%)보다 낮아져 시나리오 [4-1]하에서 80.0% (103.4%, 278.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4-2]하에서는 79.8% (105.8%, 25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1-2], [2], [3], [4-1]을 조합한 제도 개편을 시행하면 (시나리오 [5]), 전반적으로 연금 재정 상황이 호전되나 재정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존재
  - 연금 급여의 임금대체율이 50%로 상승함에 따라, 연금 급여지출액이 현행제도 (2050년 GDP의 5.1%, 2090년 6.1%)보다 소폭 증가함 (2050년 5.3%, 2090년 7.2%).
  - 연금보험료율이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입은 연금 급여지출액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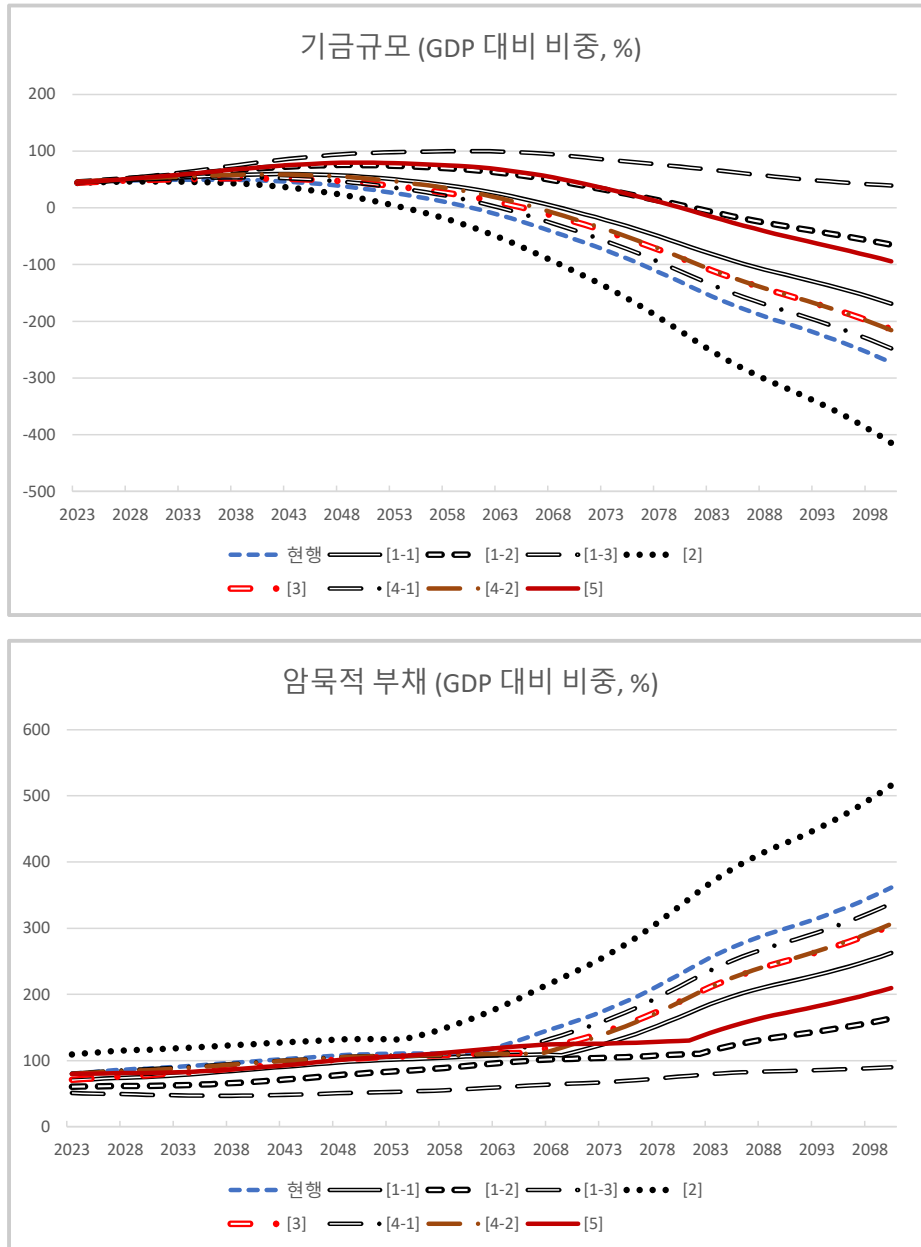
- 현행제도(2050년 GDP의 2.2%, 2090년 2.0%)보다 높은 (2050년 3.0%, 2090년 3.3%).

- 연금기금 고갈 시기도 2060년에서 2080년으로 연기됨.
- 연금의 암묵적 부채도 2023년(2050년, 2090년) 현행제도 하에서의 수준 80.1% (109.1%, 299.3%)보다 낮아져 79.7% (102.9%, 17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표 2>에 상정한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연금보험료율 상향조정, 기금수익률 상향조정으로 인해 연금기금 규모가 현행하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고갈 시기가 늦추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연금기금은 궁극적으로 고갈될 것이며,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가 잔존함 ([그림 2]).
- 암묵적 부채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과 가입자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함을 의미함.
  - 제도 개편을 통해 연금기금 규모를 늘리고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연금 부채가 남아 있으면 연금 재정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함을 의미함.
  - 따라서 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의 효과 평가시 연금기금 고갈 시기의 연장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그림 2] 기금 및 암묵적 부채 추이



출처: 저자 추계

### 3. 세대간 재분배 효과

- <표 2>에서 상정된 정책대안이 세대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세대간 회계를 이용함.
- 연금보험료율 상향조정, 연금 급여 상향조정, 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연금 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각 세대의 순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침.
  - 여기서 말하는 순조세 부담은 국민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급여의 가치를 차

감한 것을 의미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연금 급여 수준 조정의 규모와 조정 시기에 따라 세대 별로 순조세 부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 제도 개편이 각 세대의 생애 전체 기간의 순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분석
- 세대간 회계는 각 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출생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서 제도 개편으로 인한 각 세대의 회계 변화를 제도 개편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세대간 회계의 개념은 <부록 2> 참조).

■ 현행제도와 <표 2>에 제시된 제도개편안을 상정한 세대간 회계 (생애 순조세부담) 추계결과를 [그림 3]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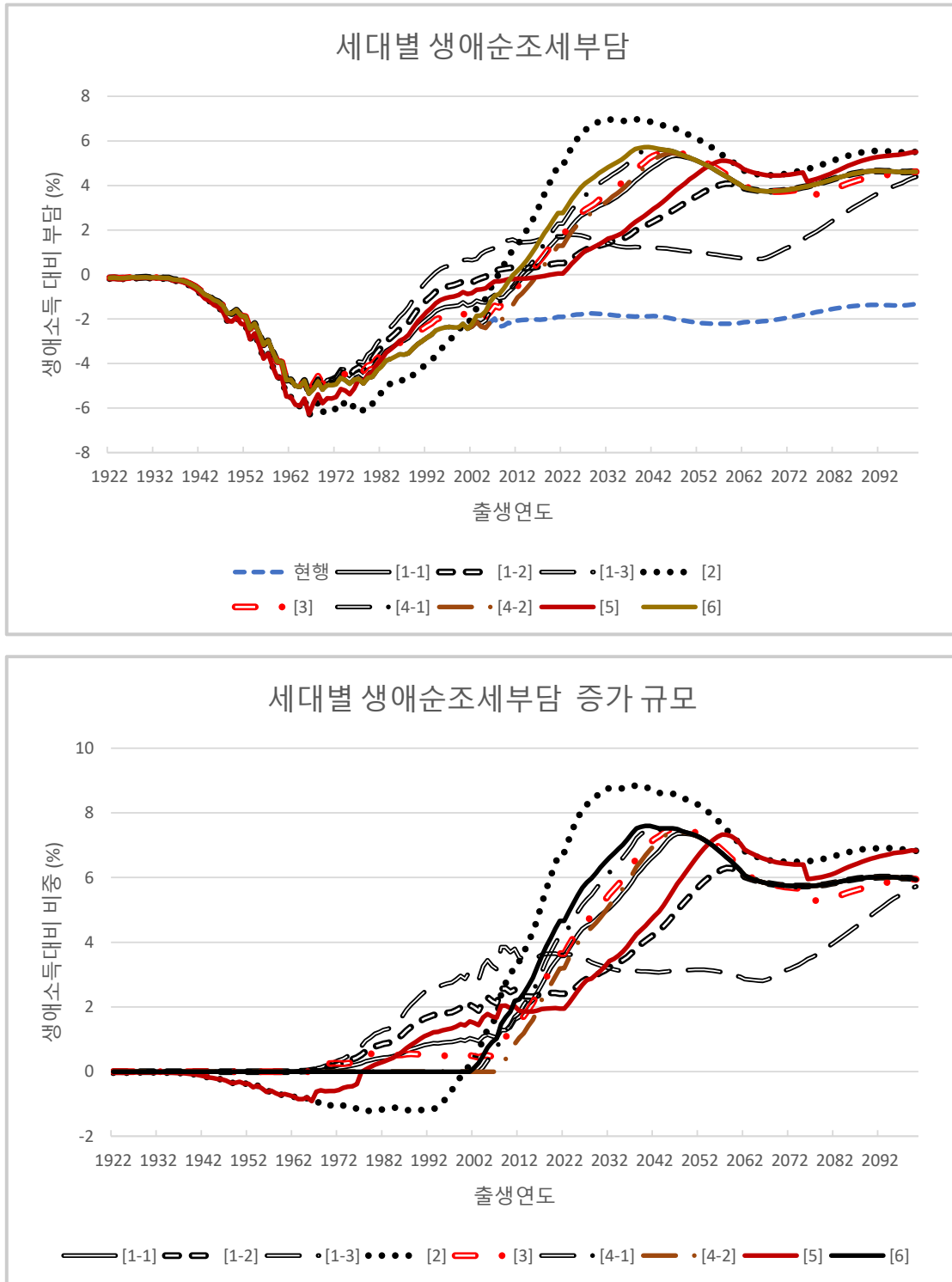
- 현행제도를 무한기간 동안 유지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생애 순조세부담 추계
  -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연금으로 인한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누적적으로 증가하므로 연금 재정이 유지가능하지 못함.
  - 현행제도 하에서의 회계는 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해석할 필요
- <표 2>에 제시된 제도개편안 실행과 함께 연금기금 고갈 시점부터 연금 재정 운영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병행 실시
  - <표 2>에 제시된 제도개편안은 연금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표 1>, [그림 2]).
  - 연금기금 규모가 커지고 기금고갈 시기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암묵적 부채가 잔존하고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의 암묵적 부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단순한 형태의 제도개편안인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상정하였음.
  -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매년 보험료 수입과 연금 급여 지출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연금의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 재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단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60년 연금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 하에서 연금보험료율이 약 30%에서 상승하여 2077년 34%로 정점에 이른 이후 하락하여 2090년에는 28.2%에 이름.

- 현행제도 하에서의 회계는 모든 세대에 걸쳐 생애 동안 수급할 국민연금 급여 수급액의 가치가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가치를 웃돌아 순조세부담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음.
  - 195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출생한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에 비하여 낮음.
    - 국민연금 도입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급여의 임금대체율, 낮은 수급개시연령 등으로 인해 연금 급여 수준으로부터 이들 세대가 혜택을 받은 것임.
  - 현시점의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은 이들 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순조세부담이 음(-)의 수준임.
  
-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편안들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개편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그림 3]은 각 제도개편안 시행시의 세대별 순조세부담 수준 (위쪽 도표)와 현행 제도하에서의 수준과 각 제도개편안 실기에 따른 순조세부담의 변화(아래쪽 도표)를 나타냄.
  - [그림 3]의 아래쪽 도표에 제시된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제도 개편 대안별로 나누어 [그림 4]에 제시
  
- 연금 재정 안정화를 제도 개편 없이 연금 기금고갈 시점부터 부과방식으로 불가피하게 전환하는 상황(시나리오 [6])을 추가로 상정하였음.
  - 시나리오 [6]하에서 2003년 이전 출생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변화가 없으나 2003년 이후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순조세 부담 증가 폭은 세대마다 다르나 세대에 따라 생애 소득의 6~7.5% 증가하는 세대도 있음.
  -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이전에는 보험료율이 9% 수준에 머무나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연금보험료율이 3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게 됨.
  - 부과방식이 적용되는 생애 기간이 더 길어지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생애 순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됨.
  
- 연금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 ([1-1], [1-2], [1-3])이 시행되면 중년층과 노년층과 비교하면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순조세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그림 4]).

- 높아진 연금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경우가 중년층과 노년층에 비하여 길기 때문임.
    - 이미 은퇴한 세대와 은퇴 연령에 도달한 세대들(1960년대 초반 이전 출생 세대)은 이 제도 개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 연금보험료율 조정폭에 따라 세대간 재분배가 다르게 나타남.
    - 연금보험료율 조정폭이 클수록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현시점의 청년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연금보험료율이 높게 조정될수록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커지나,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부과방식이 적용되는 시기가 늦추어짐.
    - 이에 따라 출생 연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세대들의 순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만 출생 연도가 늦은 세대들의 순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부과방식이 적용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먼 미래 출생 세대들의 순조세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연금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2])이 시행되면 2000년대 이전 출생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4]).
- 연금보험료 부담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연금 급여 상승의 혜택을 받는 세대들의 순조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 연금 급여 지출의 증가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조기에 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임.
-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3])을 시행하면 연금 급여 수준이 소폭 낮아짐에 따라 순조세부담이 1960년대 후반 이후 출생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높아짐([그림 4]).
- 시나리오 [3]은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등의 제도 개편을 상정하지 않으므로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65년으로 다소 늦어짐에 따라 부과방식이 적용되는 시기가 늦어짐.
  -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은 시나리오 [6]에 비하여 일부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하고 또 일부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 변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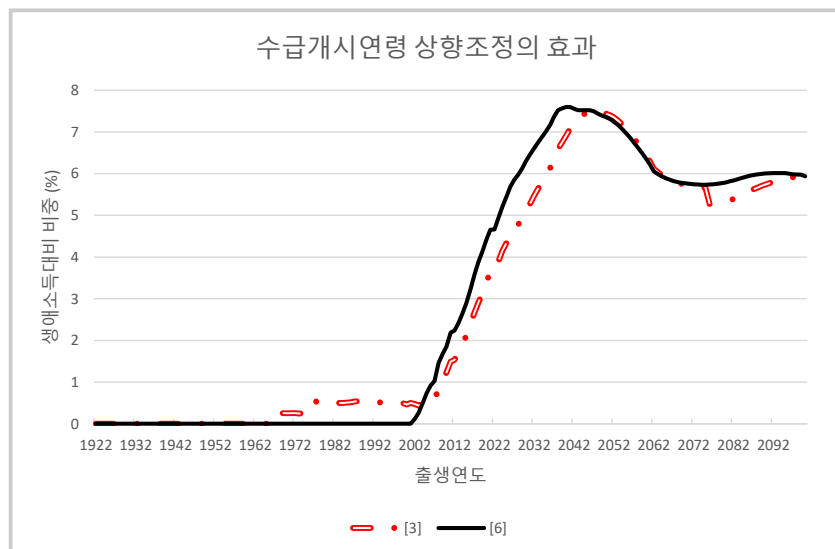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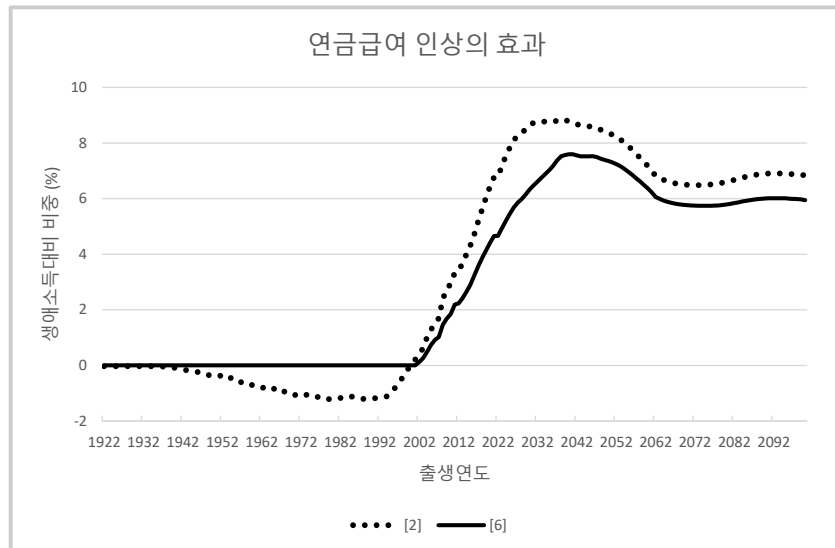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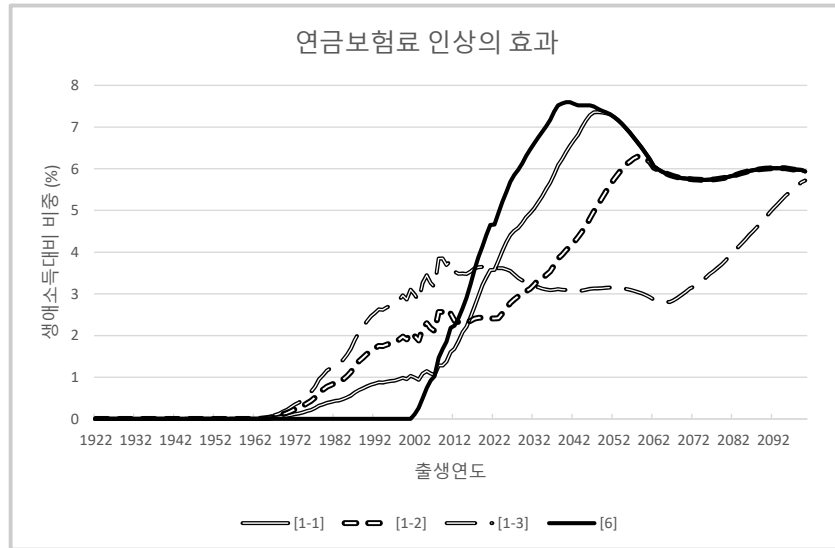
- 연금기금 수익률이 0.5%P, 1.0%P 높아지는 상황을 상정한 대안 ([4-1], [4-2])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4).
  - 연금기금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가 각각 2년, 6년 늦추어지고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시기가 늦추어지는 효과가 있어 일부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안 [6]에 비하여 줄어들지만, 순조세부담이 줄어드는 세대의 범위는 한정적임.
  
-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1-2]), 연금 급여 임금대체율 상향조정 ([2]),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3]), 기금수익률 0.5%P 상승 ([4-1]) 시나리오를 조합한 시나리오 [5] 시행으로 인한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그림 4).
  - 연금 급여 수준 상승으로 인해 1980년경 이전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감소함.
  - 1980년경 이후 출생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하나, 별도의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시행 없이 연금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안([6])하에서보다 일부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감소하고 또한 일부 세대의 부담이 증가함.
    -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조기 실시로 인해 출생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세대들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출생 시기가 비교적 늦은 일부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감소함.
    -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조시 실시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순조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2055년 이후 출생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은 대안 [6]과 비교하여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대안 [5]의 시행으로 인해 연금 고갈 시기가 늦어지지만, 기금고갈 이후 적용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율이 연금 급여의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그림 3] 세대간 회계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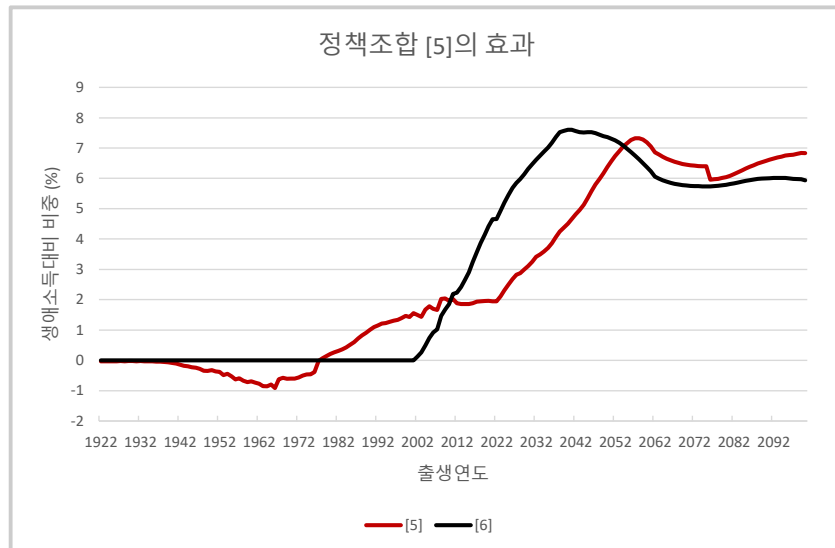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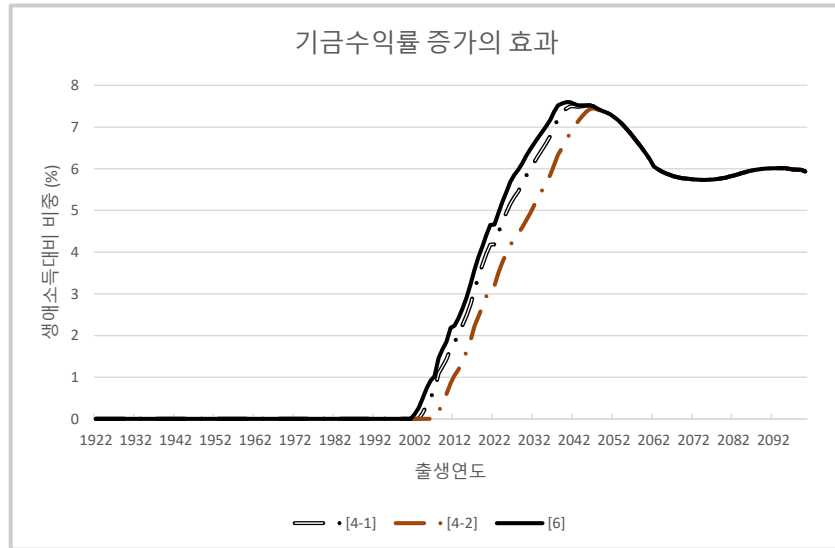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추계

[그림 4] 제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 [그림 4] 계속 -



자료: 저자 추계

##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자료에서는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하에서의 연금 재정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연금 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확충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제도개편안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였음.
  - 또한 이러한 제도개편안들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음.
- 현시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 재정은 상당히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 1,0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있으나, 연금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임.
  - 연금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는 연금의 ‘암묵적 부채 수준은 2023년 시점에 1,825조 원(GDP의 8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 재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GDP의 1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연금 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을 고려하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제도 개편이 필요함.
  - 별도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연금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보험료율이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함.
  -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생 연도에 따라 부담의 증가 폭이 다르지만,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 폭이 생애 소득의 6~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연금 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연금기금의 증가, 연금기금 고갈 시기 지연, 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줄여 연금 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편은 세대간 재분배를 유발함.
    - 출생 시기가 비교적 빠른 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늦춤으로써 출생 시기가 비교적 늦은 세대들의 순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확충을 위한 연금 급여 수준의 상향조정은 연금 기금을 줄이고, 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기며, 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늘려 연금 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연금 급여의 상향조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 일부의 순조세부담을 줄이지만, 현시점의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기금 수익률의 상승은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순조세부담이 줄어드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 혜택을 받은 세대의 범위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기능 등을 다양한 측면의 고려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도 개편은 어느 측면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임.
    -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의 심각성, 노인인구의 빈곤율 향후 추이, 그리고 빈곤율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의 존재 여부와 그 대안의 효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최소한 본 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위험을 가중될 것이며,
    -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 위험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유지 가능성도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민연금제도의 유지 가능성은 다른 제도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음.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여타 노인 관련 서비스 등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 제도를 통한 정부 지출의 절대액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중도 증가할 것임.
  -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는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정부 지출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부 지출 중 국민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수준인가? 등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목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참고문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2060년 국민연금재정전망”, 「NABO 브리핑」, 2019. 08. 29, 제64호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전망Ⅲ,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과 재정전망」, 2023년 3월

전영준, “한국의 세대간 회계 2013-2018”, 「한국경제의 분석」, 제26권 제2호, 2020, pp. 167-224.

## 〈부록 1〉 재정추계 방법

■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연금보험료 및 연금 급여 수준 추계
- 연도별로 각 인구집단 (성별 연령별) 연금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합산하여 연도별 연금보험료 수입과 연금 급여지출액 총액을 산출
- 국민연금 기금 추계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추계
  - 당해연도 기금 = 전년도 기금 × (1+ 기금수익률)
    - + 연금보험료 수입 - 연금 급여지출액 - 관리운영비
    - 기금수익률은 재정추계에서 상정한 이자율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 관리운영비는 연금 급여지출액의 1.6%로 가정
 (국회예산정책처, 2023 참조)
- 국민연금 암묵적 부채 추계
  - 암묵적 부채 = 해당연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수급할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 - 사망 시까지 징수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 - 해당연도의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연금보험료 및 연금 급여 수준 추계

- 재정추계의 출발은 2021년도로 함.
- 2021년과 그 이후 연도의 성별 연령별 연금보험료 및 연금 급여 추계를 위해 200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위해 추계된 국민 연금보험료와 국민연금 급여의 연도별 성별 연령별 분포 자료를 이용하였음.
  - 이 자료를 보정하기 위해 2017년 사회보장재정 추계 시 이용되었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가정(〈표 A1〉)과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였음.
  - 다시 말하면, 각 연도의 연금 급여와 연금보험료의 분포는 2008년 재정재계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1인당 평균 수준을 비교적 최근의 연금보험료 및 연금 급여의 총액에 대한 추계결과와 최근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보정하였음.

〈표 A1〉 거시경제변수 가정(%)

	2018~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
실질경제성장률	3.0	1.7~3.0	1.2~1.6	0.9~1.1	0.5~0.9
실질임금상승률	2.0	2.1~2.2	2.0~2.1	2.0	1.6~1.9
물가상승률	1.8~1.9	2.0	2.0	2.0	2.0
실질금리 <sup>1)</sup>	1.0	1.1~1.5	1.5	2.0	2.5

주: 1) 실질금리 수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7)보다 최근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소폭 높은 수준을 가정하였음.

자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7)

## 〈부록 2〉 세대간 회계의 개념<sup>1)</sup>

■ 세대간 회계는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 (=국민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급여)의 가치를 추계한 것임.

- 전 생애의 순조세부담을 추계하는 FLGA는 RGA와 FGA로 구성
- RGA: 출생 시부터 기준 연도 이전 동안 부담한 순조세부담
- FGA: 기준 연도부터 잔여 생애 동안 부담할 순조세부담

■ RGA ( $N_{t,k}^R$ )는 과거에 부담한 순조세를 의미

- $N_{t,k}^R$ 는 k 연도에 출생한 평균적인 개인이 출생 시부터 기준 연도 (t) 이전 (k~t-1)까지 부담한 순조세 ( $T_{s,k}$ )를 복리( $r$ )로 기준 연도 가치로 환산한 것임.

$$N_{t,k}^R = \sum_{s=k}^{t-1} T_{s,k} \prod_{j=s}^t (1+r_j) \quad (1)$$

■ FGA ( $N_{t,k}$ )는 k 연도 출생자로서 기준 연도(t)에 생존한 세대의 평균적인 개인이 사망시까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조세부담 ( $T_{s,k}$ )의 현재가치를 의미

- 모든 개인은 최대 D 세(추계 시 99세로 가정)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의 출발점이 출생 연도(k)와 기준 연도로 함 ( $s=\max(t,k)$ )
  - 기준 연도 출생 세대와 기준 연도 이후 출생 세대인 미래세대는 출생 시점부터,
  - 기준 연도 이전 세대의 경우 기준시 연도부터 추계하므로 기준 연도 출생 세대 제외한 현재세대의 회계는 과거의 순조세를 포함하지 않음.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이 회계를 ‘전망적 (forward-looking)’ 회계로 지칭

$$N_{t,k} = \sum_{s=\max(t,k)}^{k+D} T_{s,k} \prod_{j=t+1}^s \frac{1}{1+r_j} \quad (2)$$

■ FGA ( $N_{t,k}$ )는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 (식 3) 하에서 추계함.

- 정부의 예산제약은 기준 연도 시점에서 무한시계의 미래까지의 연금 재정지출의 현재 가치가 연금 재정 수입의 현재가치와 현시점의 연금기금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임.

1) 세대간 회계의 개념과 추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영준(2020) 참조

- 식 (3) 좌변의 첫째항은 기준 연도에 생존한 (출생 시점이 기준 연도 혹은 이전,  $k=t-s \leq t$ ) 현재세대의 FGA (순조세부담)의 합을 의미함 (1인당 평균 FGA ( $M$ ) × 해당 세대의 인구수  $P$ )
- 두 번째 항은 기준 연도 이후 출생 세대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합을 의미
- 좌변의 세 번째 항( $W$ )은 기준시점 현재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을 의미

$$\sum_{s=0}^D N_{t,t-s} P_{t,t-s} + \sum_{s=1}^{\infty} N_{t,t+s} P_{t,t+s} + W_t = 0 \quad (3)$$

- 본 자료에서는 각 연도의 「국민연금통계연보」에 수록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RGA를 추계하였음.
  - 기준 연도 이전 연도별 성별 연령별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통계연보」의 성별 연령별 급여 종류별 급여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였음.
  - 연금보험료는 각 연도의 성별 연령별 표준소득월액별 가입자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RGA 추계를 위한 이자율 시리즈는 전영준(2020) 연구에서 사용한 이자율 시리즈를 이용하였음.
- 본 자료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이 각 연도의 성별 연령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각종 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다음 각 세대의 FGA를 추계하였음.
  - 먼저 현행의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 급여 수준을 추계함.
  - 다음으로 <표 2>에서 상정한 연금보험료와 연금 급여 조정 시기와 조정폭을 반영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연금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추계함.
  - III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 2>에서 산정한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만으로 식 (3)을 충족시키지 못함.
  - 연금 재정 제약 (식 3)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연금 재정 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연금보험료를 재 추계함.
  -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식 (2)를 이용하여 (출생 연도로 구분된) 각 세대의 FGA를 추계함.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2부 종합토론

**좌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토론**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및 논설위원

김영순 서울과기대 교수

박주하 서강학보 (전)기자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

김민경 숙대신문 기자

김 설 청년유니온위원장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토론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 MEMO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토론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및 논설위원





## MEMO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토론

김영순  
서울과기대 교수





# MEMO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토론

박주하  
서강학보 (전)기자





## 토론문

박주하 서강학보 (전)기자

### 〈요약〉

“국민연금은 대국민 사기다.” 요즘 청년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입니다. 최근 5차 추계에서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부터는, “2055년까지 연금을 내기만 하다가 다 날리겠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고, 국민연금 개혁 자체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세대의 여론은 ‘진정한’ 청년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후 월급의 30%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현실과, 지금이라도 제대로 개혁을 한다면 국민연금이 지속되어 납부한 금액에 5% 수익률을 얻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단순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부채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올려야 하며, 기초연금 등 구조적 개혁도 미래를 위해 단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놓아버리는 무책임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선의 대책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기준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뿐 아니라 수많은 미래세대들도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것, 그런 방식의 외면을 오히려 악용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전 세대가 함께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전 문〉

안녕하십니까. 서강학보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박주하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쟁을 바라보며, 매년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처지가 고려되지 않음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 연금에 대한 제가 느끼는 청년세대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청년세대 의견 반영의 필요성: 청년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

- 국민연금 논의에 있어, 청년, 그리고 미래세대의 의견은 ‘최전선의 당사자’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연금 논의는 ‘이미 적게 내고 많이 받으신 기성세대’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가 배격되는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분명 청년세대의 무관심과 무지함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국민연금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은 “우리는 내는 만큼도 이제 못 받는 거 아니야? 폐지해야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은 국민연금 개혁에도 애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든 여전히 청년들 본인에게는 도움이 일절 되지 않는다는 생각, 즉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불신에서 비롯된 국민연금에 대한 무지함과 무관심이 오직 청년들만의 잘못일까요? 국민연금은 후에 청년들이 온전히 져야 할 빚인 미적립부채를 발표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며 “더 받을래(소득대체율 증가안) 아니면 지금 처럼만 받을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소득대체율 증가안이 나올 정도면, 사실 국민연금 괜찮은데 우리 또 속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 2.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의 투명한 공개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

-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전영준 교

수님께서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작년부터 다른 친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실제 제가 미래에 저야 할 빛이 그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발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안건 적용 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60년에서 53년으로 7년이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안건이 논의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청년 세대들이 본인이 실제로 50살부터 어쩌면 은퇴할 때까지 월 수입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걸, 그런 상황이 기성 세대들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도, 청년 세대들이 크게 반발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은폐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자료가 공개적으로 전달돼 특히 청년들, 그리고 아직 더 어린 미래세대들도 본인들의 이야기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한시라도 빠르게 보험료를 높여야

- 국민연금에 대해 청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왜곡 없이 투명하게 직시했다는 가정 하에, 청년의 입장에서 주장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보험료율을 18%에 가깝게 올려야 합니다.
- 사실 청년들은 언론에서 매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고갈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갈이 55년이 된다고 하면, “55년까지 내기만 하다가 하나도 못 받고 국민연금 자체가 폐지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그만큼 정부에 대한 믿음과 불신이 쌓여 있기에 가능한 생각일 겁니다. 정말로 받을 수 있다고 약속받았지만, 내기만 하다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그렇지만 사실 국민연금의 취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 만큼, 국민의 노후 보장의 보루를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소한 국가는 보험료율을 무위험이자율로 투자했을 시 미래에 얻을 수익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또한 명확하게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 즉 국가는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적어도 낸 돈에 수익률을 더한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정상 수준으로 올려놔야 합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

을 18%가 내는 만큼 받는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청년 세대에 게도 분명히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며, 이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지만 하루빨리 국민연금을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 4. 구조적 개혁 측면-기초연금

- 사실 앞서 연설해주신 전영준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화를 이뤄내는 데에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 수익률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연금 기금의 현재 규모 하에서는 궁극적으로 연금이 고갈되고, 암묵적 부채가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모수개혁에서 더 나아가 ‘구조개혁’ 또한 당연하게도 진행돼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채우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연금은 적절하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위를 좁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한 뒤, 여기서 아낀 재원을 국민연금의 부채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 5. 가장 필요한 것은,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개혁을 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시험기간에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시험 전날까지 계속 미루는 과목은 ‘해도 안 될 것 같음’ 과목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확신의 부재입니다. ‘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반복되는 개혁 미루기를 이번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선의 대책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기준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뿐 아니라 수많은 미래세대들도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청년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것, 그런 방식의 외면을 오히려 악용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들이 더욱 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토론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





## MEMO



#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토론

김민경  
속대신문 기자





## 토론문

김민경 속대신문 기자

올해로 국민연금이 시행 35년 차를 맞았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취지와는 무색하게 기금이 고갈되고 있던 논란이 한창이다. 심지어 1990년생부터는 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 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태 미뤄온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해 야 한단 어마어마한 책임을 청년에게 부여하고 있다.

청년 수는 줄고 노인 수는 증가해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2021 장래인구추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0.73 명에서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 비율은 올해 44%에서 오는 2070년 84.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급 중단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 평균수명 증가로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많아졌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인 18.2%의 절반에 불과하다. 연금제도 도입 후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 총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약 915조원이다. 그 러나 현재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연금액은 기금 총액의 2배를 훨씬 넘는 2500조에 달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실질적 부채는 약 1600조로 예측된다. 해당 부 채는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인 상황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출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년부터 1974년 출생)가 연금 가입자로 있을 때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하기 전까지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국민연금, 연금제도를 마음 편히 누리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청사진을 마련해 논의해야한다.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 토론

김 설  
청년유니온위원장





## MEMO